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 11. 16.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07. 11. 19.
- 상 정 일 : 2007. 11. 2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가. 제안이유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의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2006. 9. 27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2007. 9. 28일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하수도 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임

나.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안 제2조) : 공공하수관거로부터 50미터 이내로 정함
- 중수도 설치 및 관리(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하수도사용료 (안 제14조, 별표2 및 별표3)
-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안 제19조)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안 제22조 및 제23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안 제24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요금의 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근하)

< 법적검토 >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 10. 19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고
- 또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2007. 8. 1일부터 2007. 8. 3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쳤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임.

< 행정적 검토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고, 하수도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와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를 통합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음.

○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 ▶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를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 부터 50미터로 규정을 하였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하수 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되어있어 조례안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하수처리구역의 범위가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 제5조 (하수관거의 준설 등)에는 “시장은 년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이 될 것임.
- ▶ 제7조 내지 제10조는 최근 중수도의 활용범위확대 및 사용자 인식 변화에 따른 중수도 개념정리 와 중수도 설치신고 사항과 중수도의 관리 활용범위를 명시한 내용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음.

▶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 별표2의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검토하여보면 가정용과 산업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 일반용은 업무용 3단계와 영업용 5단계를 통합하여 일반용 4단계로 조정 통합함에 따라 현행 영업용 101톤 이상 690원, 501톤 이상 780원으로 누진 부과하는 단계가 삭제됨에 따라 영업용 다량배출업소의 사용료는 하향 조정된다 할 것임.
- 대중탕용은 현행 욕탕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부과하던 것을 1종만 대중탕으로 명시하여 톤당 270원으로 하고, 2종은 일반용의 범위내로 포함시키는 개정사항으로 근본적인 하수도 사용 요율에는 큰 변화는 없다 할 것이며
- 또한 별표3의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는 현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와 동일한 체계로 개정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제19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는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배출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2005. 4. 16일 제2005-251호로 공고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에 의거 1일 배출량 1세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 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개정내용이 되겠음.
- 따라서 원인자 부과대상 1일 하수 배출량이 현행 1세제곱미터에서 10세제곱미터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대폭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됨.

▶ 제20조, 제2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개별건축물, 타 공사에 대한 부분과 타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조별로 명시 하였으며

- ▶ 제23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는
 - 별표7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명시 되었는바, 별표7의 부과기준이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내용과 부과기준이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한 내용은 없음.
- ▶ 또한 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된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규정내용은 향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고 판단 시, 2007. 5. 17일 제정하여 2007. 11. 18일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가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중수도 관리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김명섭 위원)
- 조례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로 부터 5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 여부와 문제점은?(김병창 위원)
- 업종구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될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김병창 위원)

나. 답변요지 <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

- 현재 중수도는 설치 신고자가 실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내 중수도를 신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으나, 향후 중수도 부분에 대하여는 꼼꼼히 챙기겠음
- 현재 관로를 1m 매설시 10만원 정도 소요됨으로 시민의 부담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50cm로 짧게 하였음
- 2006년 기준 약1,5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측하며 현실화율이 조금 부족함으로 향후 요금 조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소 수 의 건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